

국제화시대 정보통신

윤동윤 체신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KBS 1TV 「정책진단」에 출연해 방송대담을 통해 체신부 관련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 방송대담에서 윤장관은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통신사업 구조개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각종 통신요금조정등 각종사업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담에는 패널리스트로 변도은씨(한국경제신문사 주필), 진용욱씨(경희대 교수)가 참석했다.

- 편집자주 -

전화요금조정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의 전화요금 구조는 시내전화요금의 경우 원가보다 싸고 시외전화요금의 경우 원가보다 비싼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구조는 원가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요금조정은 이러한 왜곡된 요금구조를 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바로잡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충실하도록 시내·외 요금을 조정토록 했습니다.

이번 요금조정은 적극적인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합리적인 사업경영을 가능하게 해 통신개방에 대비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화 요금조정에 따른 기대효과?

이번 전화요금조정은 시내요금의 인상분 이상으로 시외요금을 대폭 내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국민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

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4,500억원 정도의 국민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나 농어촌가입자 모두가 전화요금 부담이 경감되겠지만 특히, 도시보다 시외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요금조정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비록 시내전화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시외전화요금을 대폭 인하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에도 상당한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치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05% 정도 하락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편요금 인상이유는?

우편요금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는 우편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해 향상 원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때문에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우편사업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편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비용을 절약하

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워낙 낮은 요금수준으로 더 이상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우편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외전화요금 단일화에 대한 견해는?

체신부는 그동안 시외전화요금의 거리단계를 계속 줄여가며 요금을 대폭 인하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86년에 시외전화요금은 거리에 따라 8단계로 나뉘어 요금차이가 컸습니다만 현재는 2단계로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는 현재 두단계인 시외전화요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시외전화 전국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체신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요금도 물론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만 구체적인 요금수준이나 시행시기는 앞으로 통신사업자의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계획은?

이동전화는 제2사업자를 이번에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제2사업자는 96년초부터 업무를 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전화사업의 경쟁은 95년중에 요금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조정을 하고 96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선호출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경쟁을 시작하는등 경쟁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개시 1년이 되는 오는 10월 이후에 약 10%정도의 요금을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금인하에 따른 통화품질 대책은?

현재 이동전화의 통화품질은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일부 통화집중지역, 고층건물등으로 인해 전파가 차단되는 장소에서는 아직까지도 통화품질이 좋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체신부는 금년중에 이동전화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이동전화의 기본적인 시설인 교환기, 기지국, 통화회선등을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폭 확장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중에 있는 디지털 이동통신기술이 상용화 되는 96년이면 이동전화의 통화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신사업 구조개편의 주요내용과 방향은?

정부는 통신산업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편의 주요방향을 말씀드리면 ▲통신사업자는 사업영역을 확대해서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새로이 통신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기업이 쉽게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사업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선과 무선사업자간에는 각각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이 있어 한국통신과 같은 유선사업자는 무선사업을 할 수 없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유선통신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영역제한의 장벽을 허물어서 대외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통신이 독점해 온 시외전화 사업에도 경쟁을 도입하고 새로운 통신기술(주파수 공용통신, 개인휴대통신등)에 의한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통신사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해서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외전화사업자 조기선정 계획은?

시외전화의 사업자 선정은 시기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업에서는 단순한 요금의 차등에 의한 경쟁보다 기술과 영업능력에 의한 서비스의 경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해 이번에 시외전화요금도 조정했습니다만 경쟁사업자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정이나 통신망의 접속에 의한 접속료등의 결정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작업을 끝내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요금격차 계획은?

외국에서도 통신사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가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기존사업자와 일정한 요금격차를 둬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외전화사업에서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에

요금격차를 둘 것인지, 격차를 둔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신규사업자의 능력등 경쟁여건을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업 건전육성을 위한 정부 대책은?

통신사업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업자간에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업의 공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전기통신사업 공정경쟁 보장지침」이 제정돼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부문간의 재부보조를 금지하는 회계분리제도, 통일 회계기준, 통신망정보의 공개의무등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간 분쟁조정과 이용자 보호등 공정경쟁을 관리하는 기구인 통신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이 기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공정경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정경쟁 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불공정경쟁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단호하게 조치해서 공정경쟁 풍토를 완전히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방향은?

앞으로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음성은 물론, 컴퓨터 자료나 영상처럼 용량이 큰 정보를 초고속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유통망이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약 20년만에 걸쳐 총 44조 8천억원을 투자해서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기업들은 물론이고 일반가정까지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체신부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모아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체신부에는 민관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설치해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업무를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 추진계획과 추진조직이 확정되고 정부부처간에 업무분담이 결정된 상태로서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구체적인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현해 나갈 미래 정보사회의 모습을 조기에 가시화해서 일반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원격진료, 원격 교육 등의 정보화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과정에서의 부처이기주의 해소방안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국가의 장래를 대비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관계부처 모두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초고속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각부처별 역할분담이 전체적인 심의·조정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관계부처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고유의 기능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신부에는 체신부 직원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관련부처 공무원들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주관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수립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집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요정책이나 관련부처별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부처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정부관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궁화위성사업에 따른 방송·통신분야의 변화는?

현재 무궁화위성사업은 모든 공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6월 발사일정에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궁화위성은 통신과 방송 이 두가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복합위성입니다. 통신용으로는 ▲고속데이터통신등 첨단통신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상의 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상통신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을 전국의 종합유선방송국으로 동시에 전달하거나 ▲전국에 여러 개의 지사가 있는 기업체는 회상회의나 전용통신망을 경제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방송용으로는 ▲전국의 TV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다양한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선명한 화질과 깨끗한 음질로 시청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 위성방송의 국내침투에 대응하고 북한이나 만주, 일본 등 해외동포들도 우리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한민족문화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